

비료 값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지난해 비료 값이 급등하였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현장 농촌의 민심은 흥흥해지고 있다. 특히 6월 19일을 기해 비료 가격이 62% 급등하자 농민들의 반발과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비료 값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한농연 대응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비료 값 동향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62%(전년동기 대비), 소맥 96% 인상 등으로 비료 수요량 급증과 원자재 값 급등으로 비료·사료 가격은 폭등세이다. 국내 비료 값은 05년 7월 정부 차손보전 제도 폐지로 평균 31% 인상된 이래 08년 24%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뿐만아니라 올해 24%가 급등하여 현장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KG케미칼 등 주요 비료 공급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6일자로 공급을 중단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비료 수급 문제로 영농에 차질이 빚어 질 것으로 예상되자 농협에서는 6월 19일자로 비료 판매 가격을 62% 인상시켰다.

단, 농협중앙회 공급 단가는 62% 올라가지만 지역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으므로 현장 농민들이 구입하곤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상 반영시 대농업인 판매가격 추정〉

(단위:포/원, %)

구 분	평 균	요 소	이삭거름	용성인비
현재가(a)	10,765	12,400	9,550	7,950
조정가(b)	17,538	20,700	14,850	11,550
인상율(b/a)	62.9	66.9	55.5	45.3

2. 정부와 농협의 대책은?

정부와 농협은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 인상이후 하반기 판매물량에 대해 인상차액의 70% 수준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30%(300억원), 농협 30%(300억원), 업계10%(100억원)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총 인상액 1,1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비료값의 18.9% 인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3. 가격 폭등은 농업의 붕괴로 이어 질 것....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196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3,230만 3,000원보다 1.0%(33만 6000원) 줄어든 수치다. 농가당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1998년(-12.7%) 이후 9년만의 일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 수준도 1년 사이 87.7%에서 82.6%로 낮아졌다. 이는 전체 소득 가운데 32.6%를 차지하는 순수 농업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업 총수입은 2,610만 2,000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경영비는 비료·사료값 인상 등으로 1,569만

6,000원으로 3.1% 증가,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 소득은 1,040만 6,000원으로 13.9% 감소했다. 특히 소·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축산 수입은 19.6%나 급감했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등 무차별적인 농업개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료·사료 값이 지속적으로 폭등 할 경우 농업의 붕괴는 가속할 될 전망이다.

4.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비료 값 급등은 정부의 대책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비료 차손제도를 폐지하였다. 정부의 친환경 농정 기조는 방향성이 맞지만 비료차손제도 폐지는 국내 농업 환경을 고려하여 유기질 비료가 화학비료를 대체 할 환경이 조성 될 때까지 유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금년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액을 540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농가들은 유기질 비료 지원도 원하지만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화학비료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유기질 비료는 과수, 화훼, 특작 농가가 주로 사용한다.

물론 농협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41,270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555%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당기순이익 증가율 404%는 거래소 등록기업 중 26위에 해당되고 주가 상승률도 116%나 된다.

남해화학은 수출을 통해 엄청난 마진을 보면서 농민조합원에게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해화학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며 수익을 얻어왔고, 이에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과 농업인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남해화학이 반년 동안 100% 이상의 비료가격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5. 대책은 없는가?

우선 정부는 비료판매가격 차손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비료차손제도는 09년 8월 걸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발생된 비료 인상 요인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상황도 석유가 1배럴당 130달러가 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걸프 전 때 보다 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유기질 공급량이 원활히 공급하고 농가들이 적응 할 때까지 화학비료 차손제도를 일시적이라도 부활해야 한다. 아울러 농축산기자재 영세율이 올 12말로 끝나는 만큼 농축산기자재 영세율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농협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비료값 폭등에 따라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해야한다. 그리고 비료 값 상승에 따라 마진율이 높아지는 농협 취급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협중앙회의 판매수수료는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업계도 그동안 농업인들로 인해 성장하여 왔던 만큼 비료 값 인상율을 보다 낮게 책정하여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해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비료값 추가 인상액을 농협중앙회와 업계가 추가 부담하여 비료값을 동결시키고, 정부는 비료차손제도를 부활시켜 비료가격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